

## The Effects of Gender Equality and Work-family Balance on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Jin Hyun Kim<sup>#</sup>, Young Ji Song<sup>+</sup>, Sae Bom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uemjeong-gu, Bus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gender equality and work-family balance on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800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living in the D region of Busan, Korea, and analyzed using SPSS 25.0 statistical package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a high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However, those experiencing more difficulties with work-family balance felt more burden of child rearing and had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utilizing work-family balance poli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s a way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policies.

**Key words:**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gender equality, work-family balance, low fertility

### 1. 서론

한국은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6명보다 매우 낮고,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이 되는 1.3명 미만으로 떨어졌다(Statistics Korea, 2020).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인구위기

에 대한 불안과 공포 담론들로 가득하다. 저출산 쇼크, 저출산 늪, 저출산 쓰나미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Kim, 2018).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침체,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

<sup>#</sup> The 1st author: Jin Hyun Kim, Tel. +82-51-510-2126, Fax. +82-51-517-4662, e-mail. [jinhyun@pusan.ac.kr](mailto:jinhyun@pusan.ac.k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Young Ji Song, Tel. +82-51-510-1559, e-mail. [syj4444@daum.net](mailto:syj4444@daum.net)

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11~2015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점진적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2016~2020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대책을 강화하였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 2011, 2016).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로 실질적인 출산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저출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역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계층, 성, 세대 간 통합, 연대 등 포용국가를 지향으로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특히 변화된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내용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6)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1.0%에 불과하였고, 62.2%는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년 후에는 38.5%가 양성평등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36.7%는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양성간의 불평등 문제 중 가장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로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

제’가 지적되고 있으며(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실제 한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Statistics Korea(2014)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 남녀 모두 부부간에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가사분담 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52.2%) 것에 비해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16.1%에 불과하며,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지만 약 28%의 여성이 실제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의 전반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Min & Lee(2013)의 연구에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고, 성평등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성평등에 기초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도 출산과 관련이 있다. 일·가정 양립갈등의 심화는 결혼행복감을 낮춰 결국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Choi, 2012). 특히 여성의 경우 취업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Lee, 2005).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 육아휴직 급여지원과 같이 양성간의 일과 가정의 균형이 확립되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 & Choi, 2018).

한 국가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배경은 국민의 인식, 시기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출산장려금, 보육, 교육비 지원 등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Kong, et. al., 2008; Lee, et. al., 2010)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들 이외에도 자녀관, 즉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 행동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결정짓는다(Alzen & Fishbein, 1980). 이 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회의 주관적 규범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쳐 자녀 출산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대리지표가 된다. 더불어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도 강조하듯이 단순히 출산율 혹은 출산여부를 살펴보는 전통적인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어떠한 요인이 실질적으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연구는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출산의 대리지표로 설정하고,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 인식 수준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구 및 가족복지정책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일·가정 양립갈등은 자녀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여러 정부부처가 함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1, 2, 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과 출산, 양육을 기피하는 가치관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0년 1.4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0), 2019년에는 0.92명으로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64.7%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48.1%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Statistics Korea, 2018),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48.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Lee, *et. al.*, 2018). 이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출산억제정책과 출산율 변동에 방관해왔던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Chung, 2018). 1차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1차 기본계획은 양육환경의 개선을 통해 결혼과 출산 욕구를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정책이 제시되었고, 출산을 여성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보기보다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Shin, 2010; Chung, 2018).

2011년부터 시행된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대상을 맞벌이 가구 및 베이비 붐 세대로 확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육중심에서 일·가정 양립으로 이동하는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1). 하지만 일·가정 양립정책의 시행에 있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그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기업의 장기간 근로관행이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활용에 있어 성 평등성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Kim, 2018).

2016년 시작된 3차 기본계획에서는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하였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그러나 3차 기본계획은 출산율이라는 양적지표만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으며(Kim, et. al., 2019),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모든 세대가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였다. 로드맵과 수정 기본계획은 기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구현을 목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히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등과 같은 거시적 흐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회시스템의 개혁과 성 평등 및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이러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평등 심화와 전반적인 삶의 질의 악화가 저출산을 야기했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hung, 2018).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방식은 ‘저출산’이라는 현상에만 주목하여 도구적이고 실적주의적인 차원의 접근에만 주목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이고 양성평등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2.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출산과의 관계

자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출산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1991년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2003년에는 54.5%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처럼 결혼을 통한 출산이 보편적인 규범인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출산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Kim, 2005).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20~44세 사이의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미혼남성의 경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인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없어도 무관하다’의 비율이 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비율이 28.8%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과 비교하여 자녀가 꼭 필요하는 생각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2018). 이러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혼인건수 및 합계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Byun, 2018).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자녀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0).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분석한 Sin(2010)의 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들보다 2.42배 높은 출산계획을 보여주었다.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

및 출산행태의 차이를 미혼과 기혼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미혼의 경우 결혼필요성과 자녀필요성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아졌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할수록 더 많은 자녀를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6).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보듯이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행위의 전제조건인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출산의 대리지표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3. 양성평등적 가치

과거에는 남성은 아버지로서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가족들을 돌보는 육아에 전념한다는 성역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다(Naila, 2010). 이에 가계부양은 남성이, 수단적·정서적 역할인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는 성별 분업이 명확하였다(Jung, et. al., 201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생물학적 차이가 사회문화적 차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남녀 모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중상태 평행이론(Multiple equilibrium framework)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U자형의 로지스틱 커브를 따른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출산율과 결혼생활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혁명이 일어나고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회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지고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음 단계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 즉 양성평등적 가

치를 수용하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경제가 발전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여성들의 자용성 및 독립성이 증가하는 등 양성평등적 가치가 높아진다. 흥미로운 것은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출산율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Kye & Kim, 2016). 다중상태 평행이론에서의 성평등주의와 출산율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을 때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U자형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부 간 가사 분담이 잘 되는 가구가 둘째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orr & Short, 2004). 동일한 맥락에서 McDonald(2000)는 저출산 현상은 제도의 불평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 개인이 누리는 제도 중 성평등에 대한 높은 의식이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충돌되어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실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국가와 극복하지 못한 국가를 비교했을 때 여성의 지위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양성평등의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준다.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출산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Park, 2005; Kim, 2010)가 있는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계획이 더 높게 나

타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Lee, 2006; Lee & Choi, 2012; Kwon, 2014).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양성평등적 가치관만이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태도와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충돌하여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대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개인의 성평등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양성평등 인식과 사회제도 간 불일치의 결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Chung, 2009, 201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성평등 인식과 출산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경제적 자립, 가족 돌봄, 직장에서의 역할, 의사결정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적 성역할 태도가 출산의 대리지표로 사용된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더불어 저출산 정책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은 젠더평등, 저출산율, 한부모 가족 빈곤, 아동 빈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 체계 유지를 위한 여성노동력 확보 등 다양한 배경 하에서 등장하였다(Hong, *et. al.*, 2008). 남성은 임금근로자, 여성은 가사노동자라는 역할 구조가 무너지면서 여성은 가사노동과 함께 임금근로자로서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노동 과중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이다(Kim, 2011). 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는 사회적 환경 하에서 남성의 양육 참여 부재는 곧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여성은 그 대안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Um & Kim, 2011; Lee & Choi, 2012). 또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은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또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일·가정 양립의 구체적인 목표로 성형평성 제고, 출산율 제고, 여성고용률 증진, 아동발달 증진 등이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09).

하지만 여전히 고정된 성역할 인식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특히 가사 및 돌봄노동 영역에서 더욱 강하게 잔존해 있어(Sun & Cho, 2019), 취업여성들의 균형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Lee(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요 요인으로 선택한 반면, 여성은 출산 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Lee, *et. al.*(2016)은 성평등 의식에 대한 남녀 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하여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 일·가족 양립갈등, 결혼행복감,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분석한 Lee & Choi(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역할에 있어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갈등이 높아지고, 이는 결혼행복감을 낮춰 결국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과 직장에서 성평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여성일 경우 일

과 가정생활에서의 역할갈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고, 이러한 역할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은 부득이하게 출산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갈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용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Won & Choi(2018)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성 육아휴직 급여지원이 출산율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계 소득을 높여 출산결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직접 돌봄의 기회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잘 사용될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on & Choi, 2018). 또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여성 근로자의 추가 출산과의 관계를 연구한 Lim(2018)의 연구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3.52배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1.91배 높게 나타나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이 추가적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정책과 남성·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가정 양립갈등에 대한 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사용은 출산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갈등과 지원제도사용 수월성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 대리지표로 사용된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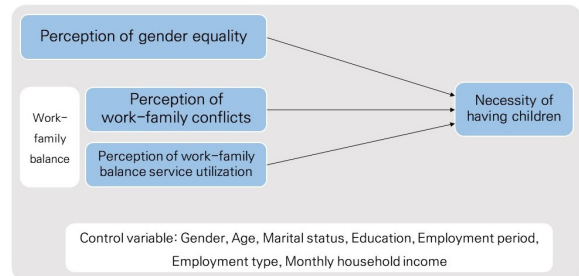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D 자치구의 구청에서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은 D 자치구 내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고,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전문 리서치 기관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는 부산광역시 D 자치구청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800명에 대한 이차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변수

##### 1) 종속변수: 자녀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와 관련하여 자녀 수 혹은 출산 경험만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녀필요성을 대리지표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출산에 더 긍정적(Lee, 2006; Kwon, 2014)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자녀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자녀필요성 척도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에서 활용된 척도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는 부정적 인식과 자녀의 정서적,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된다(Chang, et. al., 2014). 척도의 문항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녀

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은 제약이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 기회가 제약된다”,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의 중요한 원천이다”의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1-매우 반대, 2-다소 반대, 3-보통, 4-다소 찬성, 5-매우 찬성)로 측정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고 자녀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독립변수: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 인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들은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그리고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이다. 먼저 양성평등 인식 척도는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6)의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양성평등 인식을 성별 위계에 대한 태도(5 문항),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8문항)의 2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여 총 13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 가족 돌봄, 직장에서의 역할, 의사결정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을 보다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첫째는 일·가정 양립갈등<sup>1)</sup>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장 일에 지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장

일을 너무 오래 해서 집안 내 내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경우”,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직장에 도착한 경우”, “집안 내 나의 책임 때문에 직장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없었다, 2-한두 번 있었다, 3-한 달에 여러 번 있었다, 4-일주일에 여러 번 있었다)로 측정되었다. 4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직장 일로 인해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집안일로 인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사용에 대한 수월성 정도를 5점 척도(1-매우 어려움 ~ 5-매우 수월함)로 측정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총점이 높을수록 직장인들이 일·가정 지원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수월함을 의미한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0-남성, 1-여성), 연령(2019년 기준 현재 나이), 결혼유무(0-미혼, 1-기혼, 2-기타), 고용기간(0-1년 이상, 1-1년 미만), 고용형태(0-전일제, 1-시간제), 최종학력(1-초등학교,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재학, 5-대학교 졸업, 6-대학교 졸업 이상), 소득수준(1-100만원 미만, 2-100~199만원, 3-200~299만원, 4-300~399만원, 5-400~499만원, 6-500만원 이상)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 본 척도의 영문에서는 work-family conflicts로, 국문에서는 일-가정 갈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원척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에 맞추어 일·가정 양립갈등으로 사용하고자 함.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잔차(Residuals)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본 가정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한 후 양성평등 인식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이외에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의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 그리고 자녀필요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5.0 버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1>과 같다. 남성(49.1%)과 여성(50.9%)은 유사한 비율로 표집되었고, 연령의 경우도 70대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는 20대부터 70대까지 균형있게 포괄하고 있다. 결혼유무의 경우 기혼자가 전체의 67.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미혼은 전체 응답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다수가 고등학교(38.9%) 및 대학교 졸업(40.6%)으로 나타났다. 고용기간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82.2%가 1년 이상이고 나머지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형태를 보이고, 고용형태의 경우 대다수(88.5%)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은 400~499만원(29.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23.4%), 300~399만원(22.1%) 순으로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 자녀필요성 차이

성별에 따른 양성평등 인식,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인식 그리고 자녀필요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양성평등 인식과 일·가정 양립갈등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인식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 가족 돌봄, 직장에서의 역할, 의사결정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보다 동등한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800)

Variable		N	%
Gender	Male	393	49.1
	Female	407	50.9
Age	Younger than 20s	142	17.8
	30s	119	14.9
	40s	140	17.5
	50s	183	22.9
	60s	167	20.9
	70 years and older	49	6.1
Marital status	Single	201	25.2
	Married	536	67.1
	Others(bereavement, divorce, separation)	62	7.8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degree	40	5.0
	High school degree	66	8.3
	High school degree	311	38.9
	College student	51	6.4
	College degree	325	40.6
	College degree and more	7	0.9
Employment period	More than 1 year	286	82.2
	Less than 1 year	62	17.8
Employment type	Part-time job	40	11.5
	Full-time job	307	88.5
Monthly household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33	4.1
	1 million won-1.99 million won	59	7.4
	2 million won-2.99 million won	107	13.4
	3 million won-3.99 million won	177	22.1
	4 million won-4.99 million won	237	29.6
	More than 5 million won	187	23.4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Variable	Mean		t
	Male	Femal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36.3	34.9	4.016***
Perception of work-family conflict	6.8	7.6	-3.832***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service utilization	10.6	10.08	1.153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17.3	17.2	0.310

\*\*\*p<.001

존재로 인식함을 의미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성보다는 남성의 양성평등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여성들이 삶의 전반적인 현실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갈등은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일로 인해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반대로 집안일로 인하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짐을 의미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사용 수월성과 자녀필요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3>과 같다. 양성평등 인식은 일·가정 양립갈등과는 부적관계( $r=-.053, p<.01$ ), 자녀필요성과는 정적관계( $r=.181, p<.01$ )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낮게 인식하고, 자녀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일·가정 양립갈등과 자녀필요성은 유의미한 부적관계( $r=-.155, p<.01$ )를 보이는데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본 연구에서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인식 및 일·가정 양립갈등,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요인들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응답자들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기본 가정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였는데, 우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VIF 값이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의 잔차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Durbin-watson 값이 1.866으로 2에 근사하게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조건을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필요성의 다중회귀모델 적합도는  $F=4.285, 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124로 자녀필요성 분산의 1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을 충족하고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하였기 때문에 아래 <Table 4>와 같이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들 가운데서는 최종학력( $B=-.605, p<.01$ )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학력일수록 자신의 일과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자녀의 존재와 양육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인식( $B=.134, p<.001$ )과 일·가정 양립갈등( $B=-.166, p<.01$ )은 자녀필요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일·가정 양립갈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의 어

Table 3. Correlation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1	2	3	4
1.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1			
2. Perception of work-family conflict	-.153**	1		
3.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service utilization	-.035	-.073	1	
4.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181**	-.155**	.055	1

\*\* $p<.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identifying factors regarding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B	S. E.	$\beta$	
(Constant)	16.258	1.923		8.455
Gender	.038	.327	.007	.117
Age	-.025	.021	-.111	-1.194
Married	.365	.458	.063	.797
Others(bereavement/divorce/separation)	.143	.853	.010	.168
Employment period	-.479	.474	-.064	-1.011
Full-time job/Part-time job	.190	.556	.021	.343
Education	-.605	.185	-.237	-3.276**
Monthly household income	.053	.156	.022	.343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134	.037	.212	3.660***
Perception of work-family conflict	-.166	.063	-.144	-2.634**
Perception of Work-family balance service utilization	.023	.036	.036	.658
$R^2$ (Adj $R^2$ )	.124(.095)			
F	4.285***			

\*\*p&lt;.01, \*\*\*p&lt;.001

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자녀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수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필요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주요한 요인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 분석결과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출산에 더 긍정적(Lee, 2005; Lee, 2006;

Kwon, 2014)이라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높다는 연구(Park & Yeoum, 2015), 대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 결혼에 대한 의식, 출산의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Kim & Kim(201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출산의지가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양성평등 인식이 자녀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산 및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9)의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 가정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3시간 14분, 남성이 40분으로 이루어지고,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 14.4%, 여성은 86.5%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 통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 여성으로 성별 구별짓기를 탈피하고 서로 존중받으며 결혼생활, 육아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출산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홍보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저출산 원인 가운데 청년층의 결혼기피, 만혼 결혼, 출산 후 양육부담이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Kim, 2018) 젊은 층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 진행 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시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 UCC, 앱개발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성의 육아 인식 확산을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e.g., 양육과정에서 남성 역할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아버지 교실 등)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Lim, et. al., 2019). 이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가정 양립갈등의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자녀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 양립갈등이 높을수록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Yi & Jung(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는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이 어려울 때 출산기피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Song & Lee(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또한 Sun & Cho(2019)는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관련 요인이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결과 성 불평등한 가정 분위기와 성차별이 강한 직장 분위기가 둘째 자녀 출산의지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갈등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하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보듯이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은 선행 요건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직장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제도 차원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국가, 지자체, 기업의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현재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워킹맘이라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조차도 ‘그냥 엄마’와 ‘워킹맘’을 구분짓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 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여성이 직장에서 자녀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표면적으로 ‘엄마를 대신하는’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고, 아이돌보미가 배정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도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은 늘어나서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시간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자녀를 아침부터 심지어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관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속에는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함께 할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가적 제도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게 해준다는 노동 중심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국가적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에 관한 인구정책이 양적인 인구조절정책을 넘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일·가정 양립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확대, 영세사업장의 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들도 육아휴직 및 조기퇴근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Lim, et. al., 2019). 더불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육아서비스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지역사회 밀착형 서비스로,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인식은 기존 연구결과(Park & Lee, 2006; Choi, et. al., 2016)와 달리 여성보다 남성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여성들이 전반적인 삶의 현실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족부양 및 가족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일·가족 양립정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본 Jang, et. al.(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존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며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자녀출산의지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ohn, 2005; Kim, 2009).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활동과 일을 통한 개인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앞서 논의했던 일·가정 양립갈등과 자녀필요성과의 관계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 개인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보다는 학력을 높이는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학업을 마친 후 결혼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는 곧 초혼연령의 상승과 가임시기의 축소로 이어져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Skirbekk & Samir, 2012; Kye & Kim, 2016).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여성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과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저출산율을 유지하며 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가족 내 가사 및 돌봄에 대한 역할을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

책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법적인 보완과 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뚜렷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고 있다(Kim & Kang, 2018). 또 다른 저출산 관련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출산율 증가를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Chung, 2012; Kim & Cheon, 2016). 저출산 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 사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양성평등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도 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및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적 인식에 기반하여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성평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 살펴보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출산 기조에서 출산계획과 실질적 출산율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질적인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인 출산계획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회귀모형의 낮은 설명력도 한계로 지적된다. 자료의 한계로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추후에는 자녀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횡단자료의 한계로 인해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jzen, I. and M.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yun, Su Jung. 2018. Attitudes Toward Children and Family among the Never-married.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8: 19-34.
- Chang, Mi Hye, Hye Kyung Chang, Bok Soon Park, Seok Ho Kim, Jee Yeon Jeong, and Sun Mi Jo. 2014. Super-low Birthrate and Super-aging Society: Risks and Responding Strategies According to Female Social Group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Choi, Yu Jin, Taek Meon Lee, Jung Lim Hwang, Kyung Hee Ma, Jae Sun Ju, Eun Ji Kim, Hyun Jae Lee, and Hee Young Moon. 2016. 2016 A Study on the Actual Servery of Gender Equal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Chung, Sung Ho. 2009.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2): 161-183.
- Chung, Sung Ho. 2012.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31-52.
- Chung, Sung Ho. 2013. Trends, and Prospects of Lowest-low Fertility in East Asi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2): 27-44.

- Chung, Sung Ho. 2018. Issues on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1(3): 41-63.
- Esping-Andersen, G. and F. C. Billari.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06. 2006-2010 1st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1. 2011-2015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6. 2016-2020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 Hong, Seung Ah, Yun Kyu Ryu, Young Mi Kim, Suk Hee Choi, Hyun Suk Kim, and Da Young Song. 2008. Comparative Research on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it's Direction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Jang, Soo Jung, Da Young Song, and Eun Ji Kim. 2009. An Analysis of Group Differences on Perceived Work-family Bala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349-370.
- Jung, Ji Young, Jung Ae Song, He Kyung Lim, Sung Eun Cho, and Hee Sook Hwang. 2018. *Introduction to Health Family*. Gyeonggi-do: YangSeowon Publishing Group.
- Kim, Eun Jeong. 2011. Policy Analysis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Support Services Focusing on the Objectives and Beneficiaries of the Policy. *Family and Culture*. 24(3): 131-160.
- Kim, Eun Ji, Hyo Jean Song, Ho Jung Bae, Bo Young Sun, Jin Hee Choi, and Jeong Mi Hwang. 2019.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Birthrates( I ): An Analysis of the Gendered Life Perspective and Policy Validation of Youth.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Hye Young. 2018. A Crisis of Intimacy and Low Fertility: The Intersectionality of Family Policy and Population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61: 35-49.
- Kim, Jin Wook and Sang Jun Kang. 2018. An Analysis of the Path Family-friendly Policies and Culture Affect Father Involvement: Superiors and Colleagues' Mediating Effect.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4(1): 25-54.
- Kim, Kab Soon and Jeong Wha Kim. 2019.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to Childbirth Will: Focused on Mediating about Marriage Aware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3): 69-88.
- Kim, Min Gon and Ji Eun Cheon. 2016. The Study of Policy Effectiveness about Childbirth Grant a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Birthrate: Focused on 25 Districts(Gu) in Seoul. *Public Policy Review*. 30(2): 163-190.
- Kim, Min Ju. 2010.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Fertility Policie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9(2): 105-129.
- Kim, Sa Hyun. 2009.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 Fertility. *Social Welfare Policy*. 36(2): 113-137.
- Kim, Tae Hong, Seung Ah Hong, Yun Kyu Ryu, Hee Jung Lim, and Min Joung Kang. 2009. The Study of Policy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ork-family Balanc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Tai Hun. 2005. Personal Value Changes and Low Fert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2: 17-24.
- Kim, Yong Hyun.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 Perception and Promotion Plan for Overcoming Low Birthrate. ChungNam Institute.
- Kim, Young Mi. 2018. Gender Analysis on th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For Reconstruction of the Discourses on Low Fertility.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9: 103-152.
- Kong, Seon Hee, Seong Young Sohn, and Seon Duck Ahn. 2008. Improving Policy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Kwon, Young In. 2014. Understanding Expected Number of Children of Childless Married and Single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2): 251-268.
- Kye, Bong Oh and Young Mi Kim. 2016. Cultural Approach to Low Fertility: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and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Lee, Bo Ra. 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hildbirth Intention.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6: 167-168.
- Lee, In Sook. 200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ial Welfa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4): 67-90.
- Lee, Jae Kyung, Young Mi Cho, Eun A Lee, and Jeong Mi Yoo. 2005. Feminist Approach to Low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 in Europe.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1(3): 133-166.
- Lee, Jin Sook and Won Seok Choi. 2012. A Path Analysis on Birth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Lee, Sam Sik, Hyo Jin Choi, and Hye Eun Chong. 2010.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Lee, Sam Sik, Hyo Jin Choi, Gyeong Geun Kim, Ja Young Yoon, Hyun Suk Chun, Dong Sik Kim, Bong Oh Kye, Moon Hee Suh, Sang Hyup Lee, and Yoon Suk Lee. 2016. Paradigm Shifts in Family Policy on Changes i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Lee, Sam Sik.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5-140.
- Lee, So Young, Eun Jung Kim, Jong Seo Park, Soo Jung Byun, Mi Ae Oh, Sang Lim Lee, and Ji Hye Lee. 2018. The 2018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Lim, Hee Ju. 2018. Study on Influence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upon Women Employees' Additional Childbirth.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 Lim, Hyun Jung, Mi Hye Chang, Hyun Ju Jung, Hye Jung Kim, Jung Hwa Ha, Jung Hee Moon, Mi Young Hong, and Ji Young Park. 2019. Establishment of Busan Gender Equality Comprehensive Plan.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in, Youn Kyoung and Myung Suk Lee. 2013. Effects of Low-fertility Policy and Gender Equality Culture on the Fertility Rate: Focused on 18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3(2): 109-138.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Prepare for a Future Society where Family Diversity is Respected: The 3rd Basic Plan for Health Families ('16 -'20) Implementation Plan for 2019. <http://www.mogef.go.kr>.
- Naila, K. 2010.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 Critical Analysis of the Third Millennium Development Goal 1. *The Journal of Gender & Development*. 13: 13-24.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0. Population Policies History.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2000.do>.
- Park, Chai Soon and Soon Gyu Yeom. 2015.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actualization,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Marriage Value in Un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3): 1633-1651.
- Park, Hee Bong and Hee Chang Lee. 2006. Female Social Capital and Gender Equality.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0(4): 91-116.
- Park, Su Mi. 2005. Low Fertility and Gender Equity in the Famil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2: 36-44.
-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18.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Policy Roadmap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All Generations and Realizing an Inclusive Country".
- Shin, Kyung Ah. 2010. Issues and Dilemmas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 Gender Policy without Gender Perspective. *Issues in Feminism*. 10(1): 89-120.
- Shin, Mi Sun. 2010.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Expected Birth Plan of Married Women.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Skirbekk, V. and K. Samir. 2012. Fertility-reducing Dynamics of Women's Social Statu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sian Population Studies*. 8(3): 251-264.
- Sohn, Seong Young.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ies. *Family and Culture*. 17(2): 285-316.
- Song, Yoo Mee and Je Sang Lee. 2011.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1): 27-61.
- Statistics Korea. 2014. 2014 Social Survey (Family · Education · Safety and Environment).
- Statistics Korea. 2018. 2018 Social Survey (Family · Education · Safety and Environment).

- Statistics Korea. 2020. Born in 2019, Interim Results of Death Statistics.
- Sun, Min Jung and Sang Mi Cho. 2019. The Influence of Married Working Women's Work and Family Related Factors on the Willingness to Have the Second Child: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about Sex Discrimination Culture in the Workplac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35(2): 5-35.
- Torr, B. M. and S. E. Short.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 Um, Myung Yong and Hyo Soon Kim.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3): 179-208.
- Won, Sook Yeon and Youn Hee Choi. 2018. The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Rat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ing on Factors Related to the Cost for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7(3): 231-267.
- Yi, Jee Seon and Hye Sun Jung. 2019. A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Annual Trends in Childbirth Plans by Female Worker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30(3): 357-367.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계봉오, 김영미. 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선희, 손승영, 안선덕. 2008.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연구. 서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국가기록원. 2020.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2000.do>.
- 권영인. 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51-268.
- 김갑순, 김정화. 2019.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결혼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9-88.
- 김민곤, 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163-190.
- 김민주. 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2): 105-129.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 김영미.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59: 103-152.
- 김용현. 2018.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은정. 2011.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24(3): 131-160.
- 김은지, 송효진, 배중호, 선보영, 최진희, 황정미. 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1):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욱, 강상준. 2018.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4(1): 25-54.
- 김태현. 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17-24
- 김태홍, 홍승아, 유연규, 임희정, 강민정. 2009.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정양립 정책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2018. 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보건복지포럼*. 261: 35-49.
- 대한민국정부. 2006.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민연경, 이명석. 2013.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 효과: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109-138.
- 박수미. 2005. 가족내 성평등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36-44.
- 박재순, 엄순교. 2015. 미혼 여성의 자아실현,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17(3): 1633-1651.
- 박희봉, 이희창. 2006. 사회자본과 양성평등: 사회자본의 성별 특성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91-116.
- 변수정. 2018.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관련 생각. *보건복지포럼*. 268: 19-34.
- 선민정, 조상미. 2019. 기혼 취업여성의 일과 가정 관련 요인이

- 둘째 자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직장 내 성차별 문화에 대한 일·가정 양립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5(2): 5-35.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송유미, 이제상. 201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1): 27-61.
-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10(1): 89-120.
- 신미선. 2010. 기혼여성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 엄명용, 김효순. 2011.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한국인구학*. 34(3): 179-208.
- 여성가족부. 2019.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2019년도 시행계획. <http://www.mogef.go.kr>.
- 원숙연, 최윤희. 201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3): 231-267.
- 이보라. 2020.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6: 167-168.
- 이삼식, 최효진, 김경근, 윤자영, 천현숙, 김동식, 계봉오, 서문희, 이상협, 이운석.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 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21(3): 133-166.
- 이지선, 정혜선. 2019. 직장여성의 연도별 출산 계획 변화 및 관련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0(3): 357-367.
- 이진숙, 최원석. 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태도, 일가족 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5-30.
- 임현정, 최청락, 정현주, 김혜정, 하정화, 문정희, 홍미영, 박지영. 2019.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종합계획(2020~2024) 수립.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임희주. 2018.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장미혜, 장혜경, 박복순, 김석호, 정지연, 조선미. 2014.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수정, 송다영, 김은지. 2009. 일가족 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집단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349-37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성호. 2013.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한국인구학*. 36(2): 27-44.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한국인구학*. 41(3): 41-63.
- 정지영, 송정애, 임혜경, 조성은, 황희숙. 2018. 건강가정론. 경기도: 양서원.
- 최유진, 이택면, 황정임, 마경희, 주재선, 김은지, 이현재, 문희영. 2016.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통계청. 2014.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 통계청. 2020.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 홍승아, 류연규, 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송다영.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Received: Apr. 28, 2020 / Revised: Jun. 3, 2020 / Accepted: Jun. 3, 2020

##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자녀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D 자치구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9세 이상 성인 총 8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인식은 자녀필요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적 인식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인구 및 가족복지정책에서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녀필요성,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저출산

**Profiles** **Jin Hyun Kim** : He received his Ph.D. in Social Work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2010.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His areas of research are poverty, health disparities, disaster dispariti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to reduce various types of social disparities(jinhyun@pusan.ac.kr).

**Young Ji Song** : She received her Ph.D. in Social Work from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4. She is a researche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Her areas of research are social work practice, youth welfare, and children's rights(syj4444@daum.net).

**Sae Bom Kim** : She received her M.A. in Social Work from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6. S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doctoral student.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social welfare practice, civic engagement and psychosocial health of elderly(vprimaverav@gmail.com).